위기의 지방 건설업 살리기…윤곽 드러낸 2차 대책의 향방

- 도급하한금액조정 · 부실업체퇴출등, 정부및정치권의의지뒷받침되어야-

지방 건설 경기 2차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종 대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를 거쳐확정된후부처별법령및 기준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반면, 지방건설을 살리겠다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 용두사미 ’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BTL, 입찰제도개선의 키를 쥔 재경부, 행자부, 기획처 등이 대책의 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있기때문이다.

건교부박상규건설선진화본부장은 이에 대해“ 부처별로신축성을발휘할수있는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며,“ 특히「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이은‘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을 연내 마련함으로써 입찰제를 뛰어넘은 근본적 양극화 해소책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도급하한제 금액 조정

도급하한제는대형 업체의시공능력평가액1% 미만공공공사수주를금지하는제도이며시평액900억원이상의173개사(1.4%)에 적용되고 있다. 대책 마련 방향은 위헌 논란이있는민간 공사적용이나대상 건설업체수를늘리는 쪽보다적용범위를 넓히는쪽으로맞춰진다.

지자체, 투자기관 발주공사에 한해 도급하한제 적용 하한을 WTO 의무 개방 금액(2007년 74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도급하한제의확대는 건교부가 자체규정개정만으로시행할수있는과제라는 점에서 2차 대책 포함이 유력하다. 특히건설업계에서제기한민간공사확대, 적용 건설업체 확대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잠재한다. 부처협의 과정에서다른 과제의 반영실적이저조한경우건교부가대책수위를보강할수있는거의유일한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 · 투자기관, 지자체의 지역제한 대상 공사액을 현행 50억원, 70억원에서150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도 타진된다. 걸림돌은지역내소수중견업체의수주독점, 철새 건설사 급증 현상 발생 가능성과 함께 1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 대상 확대

시 최저찰 공사에 지역제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점이다.

턴키 · 최저가낙찰제개선

턴키 · 대안 개편 방향은 대형 공사 금액 기준 조정(100억원→300억원), 공동 도급 최소 참여 지분율 하향(10%→5%), 적격심사시 지역 중소업체 참여도 항목의 배점제 전환등이다. 금액기준조정안은별다른이견이없어도입될가능성이높다. 다만행자부가최저가낙찰기피수단으로의악용가능성을 우려해상향폭을200억원으로하자는의견을제시한것이변수다.

반면공동도급최소참여지분율하향조정안은작년5월공동수급체구성원의형식적 시공 참여를 막기 위해 바꾼 조항을 1년만에 되돌리면 안 된다는 재경부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또 지역 업체 시공 참여비율평가방식개선(가점제→배점제)도WTO 조달협정위배가능성을고려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의지역 업체 시공참여 비율배점제도입역시현행지역업체시공 참여가점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의중복 문제를 풀어야한다. 저가심의제보완과제는재경부가전담TF를발족해강구할종합 개선책에 반영될 전망이지만 업계 요구를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대중소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100억원 이상)의 철회는 차기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울것으로보인다.

BTL 제도개혁

BTL 제도는지난2005년7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50억원 미만 학교시설공사의 재정 발주와 번들링 규모의 200억~300억원내외조정안의이행방안이우선 모색된다. 심각한교육재정난속에주무관청인교육청의이행실적이미미한점을고려할때중앙정부차원의지침시달과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

문제는 발주기관의 재량 사항이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관철할수있다는기획처, 교육부의의식전환이지만재정절감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들 부처가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또, BTL 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업체 의무 시공 비율 상향 조정(40% 이상)도기획처가완강히반대하고있어국방부(3월중40% 비율적용방침)를제외한기타부처의수용전망은어둡다.

BTL 설계제안 보상 비용의 확대(공사비의 1.8%→2%)와학교공사에대한VE 제안제 폐지(존속시 제안 비용 보상)도 기획처 설득이 관건이다. 교육부의경우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VE 제안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밝히고있기때문이다. 반면 건설공제조합을 활용한 중소업체 참여 비율 50% 이상 BTL 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는 건교부 의지만으로 시행 가능한대안으로꼽힌다.

부실 업체 퇴출 박차

부실 건설업체 퇴출 작업도 대거 탄력을 받는다.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건설업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전문가, 업계의 일관된 요구일뿐아니라건교부자체규정만으로시행이가능하기때문이다.

퇴출 작업은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건설업 등록 기준실태점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 운영,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에 대한실사, 직접시공제관리 감독을 강화하는것이다.

등록기준실태점검은협회업무위탁조항을 담은 의원 입법「건설산업기본법과 맞물려점검주기및강도를강화하는쪽으로추진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제강화는3대공제조합과서울보증간의협의아래예치금률 상향 조정(자본금의 20~25%→25~35%), 부실건설사 대출 한도 축소, 대출 개시 시한 연장(1년→2~3년) 방안이 모색된다. 또공공공사낙찰예정자에대해등록기준등낙찰자격구비여부를심사하는 절차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30억원이상공사에시행중인직접시공의무제(공사금액 30% 이상 직접시공)에대한관리감독과처분도가속화한다. 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요구하려면이에상응하는건설업계 자체적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말해올해고강도건설구조조정 추진의지를분명히했다.

기타 지원책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질 전국 10개 혁신도시물량발주시지역중소업체를우대하는 방안도모색된다. 현행사업시행자인주공, 토공의PQ · 적격심사기준상의시공능력평가액 연동 지역사참여 가점을 개편해시평액과 관련 없이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폭도 상향조정하는것이우선적용대상이다.

나아가10조원대의 혁신도시건설사업의 PF 사업에대해지방중소업체시공비율이 40% 이상인경우해당SPC를우대하는방안도도입이추진된다. 다만지역업체가점 비율과시공 참여비율의조정이 최근개정됐을뿐아니라변별력강화를위한축소요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주공, 토공 등 투자기관의 경우 재경부 회계예규만개정되면 운용할수있다는입장이기때문에재경부가도입여부의키를쥔셈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선포지역의 복구 공사를노린철새업체의난립을막기위해입찰자격부여 대상을현행입찰공고일기준 90일 이전 전입 업체에서 180일 이전 전입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모색된다. CJ

김국진
일간건설기자